

도서상품권 사용영역 확대로 논란 일어

고유 기능 지키는 일은 출판계 공동의 몫

도서상품권의 사용영역 확대를 놓고 출판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서보급(주)(대표 이희수)는 지난 1일부터 도서상품권으로 팬시·문구·음반은 물론 패스트푸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사용영역을 확대했다. 이 대표는 “주로 젊은층이 구입하는 도서상품권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문구 등 도서 인접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패스트푸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젊은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이라고 밝혔다.

팬시에서 패스트푸드까지 영역확대

출판계의 이견은 현실론과 원칙론으로 양분되고 있다. 한국도서보급(주)의 당연직 이사인 대한출판문화협회 나춘호 회장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도서상품권이 우선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사용영역을 넓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출판사 대표는 “도서상품권은 현금으로 구입해 주로 선물용으로 쓰이고 있다. 도서상품권으로 다른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면 누가 도서를 구입하겠는가. 궁극적으로 도서상품권의 고유 기능이 퇴색할 것”이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월부터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도서상품권의 판매가 급격히 줄어든 데 있다. 교보문고의 경우 지난해 월평균 2만매 정도를 판매했지만 올해는 8천매 정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표는 “올 9월에는 지난해 9월보다 판매고가 줄었다. 이대로 가면 도서상품권 발매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용도라는 인식을 넓히기 위해 이사회가 열릴 때 영역확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연직 이사로 9월 15일 이사회에 참여한 출판협동조합



최선호 이사장은

“도서 인접 상품으로 영역을 확대

하자는 논의는 있었지만 패스트푸드 이야기는 없었다.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91년 재경부·문화부 등을 설득해 특별법까지 만들어 도서상품권을 탄생시켰으며, 지금까지 투자한 만큼 일정부분 기득권을 가진 출판계는 의사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출판계는 한국도서보급(주)가 대주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권한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결정과정에서 출판계의 폭넓은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 이면에는 도서상품권을 유독 KFC와 버거킹에서 사용토록 한 것은 이 업체들이 두산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깔려 있다. 이대표는 “다른 외식업체와 접촉했지만 도서상품권을 사용하면 5% 이상의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모두들 거절했다. 인지도를 넓히기 위해 우격다짐으로 계열사를 참여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영역을 확대하는 데는 문화상품권에 대한 대응논리도 한몫했다. 5월부터 대형서점에서 문화상품권의 판매량이 도서상품권을 추월하자

도서상품권의 사용영역이 팬시·문구·음반은 물론 패스트푸드까지 확대됐다. 도서상품권의 발매와 보급을 맡고 있는 한국도서보급(주)는 상품권법 폐지에 따른 자구책으로 사용영역을 넓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판계는 이 조치가 도서상품권의 고유 기능을 위축시킬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8천만 매가 팔린 도서상품권. 앞으로는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점에서 도서상품권의 사용영역을 넓혀줄 것을 요구했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10대, 20대의 78%가 사용영역 확대를 희망했다”고 이대표는 밝혔다. 그러나 출판계 일각에서는 사용범위의 확대가 오히려 도서상품권의 기능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출판사 대표는 “문화상품권의 도서시장 회수율이 매우 낮다. 도서 이외의 상품을 구입하기 때문이다. 도서상품권이 영역을 확대하면 판매량은 늘겠지만 상대적으로 회수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유기능 지키기 위해 노력할 때

상품권법 폐지로 각종 상품권이 제취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도서상품권의 사용영역이 넓어질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한국도서보급(주)뿐만 아니라 출판계 역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도서상품권의 고유 기능을 지키는 일은 한국도서보급(주)와 출판계 모두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출판계의 중지를 모아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오원진 기자